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 162 回

第 3 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2006年 12月 1日 (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会) 第3次 本會議

1. 시정질문의 건(계속)
 - 가. 김인식 의원
 - 나. 장문철 의원
2. 휴회의 건

附議된 案件

1. 시정질문의 건 및 답변(계속)
 - 가. 김인식 의원(일괄질문)..... 2면
 - 나. 장문철 의원(일괄질문)..... 6면
2. 휴회의 건..... 29면

(10시 00분 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및 답변(계속)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 의원으로 질문에 이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질문순서는 김인식 의원, 장문철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김인식 의원(일괄질문)

(10시 02분)

○議長 金榮寬 그러면 먼저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인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議員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호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전발전과 교육혁신을 위해 힘쓰시는 노고에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1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정현장을 직접 확인한 바 박성호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 대전과 세계적인 과학기술도시 대전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먼저, 가칭 대전복지재단의 설립입니다.

현대사회는 인구의 노령화와 핵가족 확산 등의 보편적인 사회복지 개념이 확산됨으로써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예산에서 보건·복지 부문이 차지하는 예산은 2005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14%인 1,800억원, 2006년도에는 16.8%인 2,600억원, 2007년도에는 20.2%인 3,1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되는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대전시가 지원 관리·감독하는 사회복지시설도 2005년도에는 175개소에서 2006년도에 251개소로 급증하고 있어 복지행정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전시 복지업무의 중심은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에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을 지도 감독 평가하는 공무원은 14명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자체에서도 업무 중복 또는 과중으로 각 사회복지시설의 요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반영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의 복지시설 관리시스템은 관리체계의 분산 및 전문성 부족으로 효율적,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이렇게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양화되는 시민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조금 교부에 대한 실질 심사와

수탁자 선정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절차 개선과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대전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시설간 연계와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을 지원하고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평가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타시·도에서도 이러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모색으로 민간단체와 재단을 설립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이 이미 설립되었고 충남 천안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현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본 의원도 가칭 대전복지재단이 설립된다면 대전시와 민간사회복지시설의 매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전문화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확충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에 따라 가칭 대전복지재단 설립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국비확보를 위한 대전시의 대책입니다.

매년 반복되고 또 되풀이되고 있는 일이지만 시장을 선두로 해서 시의 전공직자가 중앙정부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전쟁이라고 볼릴 정도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폭넓은 인맥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재정인사와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국비확보의 성과를 결정하는 정말로 중요한 잣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비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국가예산의 배분이 중앙정부보다 지자체로 이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예산의 여유가 없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취임 후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으며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한 사항은 무엇이고, 한 예로 허치슨 암연구소 연구비 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된 과정과 자기부상열차 국비확보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비확보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전시는 현재 국비확보를 위해 구성된 8개 팀 36명의 특별대책반을 소수정예화하여 연중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을 신설 운영하고 중앙부처에 인맥이 많이 형성되도록 중앙부처와의 교환근무활성화나 일정수당 지급 또는 인센티브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재정살리기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06년도 예산규모는 9,375억원이나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이 전체예산의 88%를 차지하는 등 교육재정수입원의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99년부터 발행한 지방채 총액이 2,590억원을 넘기고 있는 실정인 동시에 금후 상환계획 금액이 1,100억원 이상으로 지방채가 교육재정의 11%를 차지하였습니다.

하루 이자만 해도 1,600만원에 달함은 물론 설상가상으로 부족한 교육재정 보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또 지방채를 상환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등 교육재정의 건전운용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교육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열악한 교육재정운용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재정의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 11월 24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운영계획과 지방채의 상환 및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께 대전광역시의 교육재정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전시의 교육원로 및 교육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대전시가 타시·도에 비하여 교육재정지원이 인색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교육재정지원조례의 제정 등 교육행정과 관련한 공약사항을 하신 적이 있으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금년 10월 19일에 2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교육정책협의회를 적극 운영하는 등 전임시장 시절인 2002년부터 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교육은 지원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본 의원은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정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인재육성만이 우리가 선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에 대한 시장님의 공약사항 이행과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를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와 교육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현재 양 기관의 업무관련 실·국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으로 확대하고 가칭 교육정책협의회의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단체 활성화 모색입니다.

현대사회는 저출산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핵가족 확대에 의하여 1가구 1자녀가 대부분입니다.

혼자 생활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청소년 우울증, 자살 등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이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텔레비전 시청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는 여러 가지 청소년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단체를 지도하는 담당교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단체가 활성화되기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에서는 우수교사에 대한 승진우대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청남도과 서울시에서도 청소년단체 지도부분에 선택가산점 일부를 도입하려고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에 있는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인물에는 없지만 최근 언론보도나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고 정말 염려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기업사장 퇴임문제 및 정무부시장 임명 등의 인사문제와 복지만두레사업 재검토, 서남부권 호수공원 축소 등 전임시장 시절의 사업과 인사 등에 대하여 불필요한 단절이나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는 선거를 통하여 수장이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속성과 연계성이 필요한 행정도 일시에 바뀌어야 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계획을 시장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전시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사장이 단순히 전임시장 시절 임명된 사장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경영성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기중 해임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기업사장 경질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시장 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된다, 경제 등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등 설만 무성했지 결국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였습니다.

정무부시장의 역할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과 행정부시장의 업무과중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행사에 대리참석하거나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시의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 및 인터넷기사의 댓글을 보면 정무부시장은 분명히 정당인이 아닌 공무원임에 불구하고 최근 행보가 역할범위를 다소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정무부시장을 역임하신 경험을 비취볼 때 이같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전임시장 시절에 추진되어왔던 시책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및 당초 계획대로의 추진여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그리고 공기업사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공기업경영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또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경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김인식 의원 시정질문서

.....
○議長 金榮寬 김인식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장문철 의원(일괄질문)

○議長 金榮寬 다음은 장문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장문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議員 한나라당 동구 가양1·2동, 용전동, 성남1·2동 출신 장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성호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5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침체되어 있는 대전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 그간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서 느낀 대전의 지역경제 문제점들과 대안들에 관하여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들으며,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들이 적극 모색되어지는 장이 되길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2000년 13조 5,000억원에서 2004년 18조 5,000억원으로 지난 5년간 약 5조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대전시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은 2000년도나 2004년도나 여전히 2.3%에 머물러 있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은 지역의 기업체 수 및 기업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2006년 대전시 기업체 수는 약 9만여 개로 울산시를 제외한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기업체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인구 면에서 비슷한 광주시보다도 약 5,000여 개의 기업체가 더 적은 실정입니다.

한편,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대전의 법인기업 중 자산규모가 1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체 수는 2003년 315개에서 2004년 294개로 21개나 감소하여 지역경기 정체 내지 약화의 심각성이 더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대전의 산업구조는 소비성 서비스산업으로의 편중현상이 심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조업 비중은 지역 선도산업의 부재로 나타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 경제적인 역동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대전시는 지역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회복하고자 대덕연구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통해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7년 IMF 이후 IT, BT, 메카트로닉스, 첨단부품산업 등의 벤처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대전의 등록·비등록 벤처기업 수는 총 919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첨단벤처기업들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전의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한 예로 2006년 1~3분기 대전의 벤처기업 수출액은 1억 6,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7%가 증가하였으나,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2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첨단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첨단벤처기업들이 대전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단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의 전략산업진흥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의 전략산업진흥사업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전략산업으로 생물의학,

정보통신, 고주파부품, 지능로봇산업을 선정하여 산업자원부와 대전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기반구축사업과 첨단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전략산업진흥사업의 전반적 평가에 의하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중장기적·근본적 변화보다는 단기적·가시적 성과를 추구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전략 부재와 각종 중앙정부 사업의 중복 및 복잡 다기화, 지역의 관심과 지원 부족, 중앙의 획일적 사업운영모델 및 과도한 간섭과 규제,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 확보장치 미흡, 실효성 없는 평가체제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전반적인 사업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및 대안으로 지역진흥사업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다는 판단 아래 기존 사업이 끝나는 2007년 이후의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한편, 제한적 지원방안의 하나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긴 후에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논의들이 현실화되어 2007년 이후 지역전략산업의 추가사업이 중단된다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은 엄청난 손실과 차질을 빚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전의 경우 지금까지 투자된 IT, BT, RT, RF 사업을 위한 건물과 장비들은 건물 임대료와 장비임대 수수료만 정수하게 되는 임대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정책실패에 따른 운영 모순이 발생하여 지역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2007년 이후 추진할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전 테크노파크의 설립 재추진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얼마 전 산업자원부가 지역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였던 테크노파크 사업에서 전국 시·도 가운데 대전시와 제주도만을 제외한 14개 시·도 모두에 테크노파크를 설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가 산업자원부의 테크노파크 사업에서 제외된 이유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능과 중복된다는 이유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전략 특화사업 기반구축, 첨단산업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사업, 대덕특구 내 첨단벤처기업 육성 등의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같이 기술혁신 역량이 결집되어 있는 지역에 테크노파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이 중앙정부 전유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전과 국가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누구나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테크노파크가 우리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 적극적으로 재건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벤처기업의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최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벤처기업들이 부족한 산업용지와 인력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제품생산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한 예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광학부품 전문 제조업체인 ‘해빛 정보’는 중국 후베이성 무한에 부지 5,100평의 대규모 생산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분석기기 전문 업체인 ‘케이맥’이 중국 곤산에 R&D센터 법인설립 현판식을 가졌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를 개발하는 ‘가이아’ 역시 중국 청도에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대전에서 창업하여 성장해온 업체들이 대전을 등지고 다른 나라에 공장과 연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대전의 지역경제 위기를 한층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대전시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특구 내 벤처기업들이 대전을 기반으로 원활한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대전시가 대덕연구개발특구 과급효과의 최대 수혜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현재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덕테크노밸리 내 대기업 용지 3만 1,000평을 2,000~5,000평 규모의 소규모 형태로 분할 매각하여 첨단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첨단기업들의 입주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안과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테크노밸리 산업용지의 불법매각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신문 보도 내용에는 테크노밸리 내에 입주한 일부기업들이 분양 받은 산업용지를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거나 합법적인 시세차익을 노려 빈 건물을 짓고 타인에게 매각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한 산업용지를 분양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금처럼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지역 기업들이 외부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용지를 분양 받은 일부기업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프리미엄을 붙여 판다는 것은 대전시 입장에서 매우 큰 손실입니다.

따라서 산업용지의 불법투기를 방지할 대전시 차원의 조례 제정이라든지 제재조치를 명문화하여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의 실업극복과 일자리 창출 부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현재 전국의 평균 실업률이 3.3%에 이르는 가운데 대전의 실업자 수

는 3만 3,000명이며, 실업률은 4.7%로 서울의 실업률 4.6%를 넘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의 자체조사 결과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들은 1년 단위의 고용과 100만원 미만의 임금이 대부분인 일자리들로써, 단순 노무직인 환경개선사업과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간병인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은 현실적으로 실업문제 극복과 고용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시장님은 시의회의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복지·문화·환경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과 시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복지서비스이며 권리이지, 이런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적 일자리로 대체되어 실업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의 방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실업문제 극복과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순 일자리 소개와 알선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의 일자리 수요조사 및 관련 정책 개발, 구인 및 구직자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과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구인·구직 알선 업무와 교육·훈련 업무만 해도 벅찬 상태로 이들 기관에서 지역의 일자리 수요 조사와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체계적 관리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전시가 앞장서고 중심이 되어 통합된 사회적 일자리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가 중심이 되고, 민간·시민단체, 지역의 기업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각 구청 단위로 ‘일자리창출센터’를 설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시장께서는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네트워크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화 속에서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개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대전시의 행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을 펼치고 있어 타시·도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해외시장개척단과 유망박람회 참관 지원, 통상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지역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면서 「충청권경제협의체」를 기반으로 해외사무소를 공동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대전시 해외사무실은 남경, 심양 2곳과 노보시비르스크 전시관 1곳으로, 파견 인원은 남경 시에 행정 6급 1명, 심양 시에 7급 1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운영비는 재정부족의 이유로 해외 사무실 2곳과 노보시비르스크 전시관 1곳에 7,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대전상품 전시관에는 우리 시 파견 공무원 없이 현지인이 교류활동과 통상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어 조직과 인원, 예산 모두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의 심양 시는 대전시와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시실과 사무실, 직원 1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심양사무소 운영비를 연간 1,000만원 정도만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어 예산지원에 소극적인 실정입니다.

또한 범 충청권 해외사무실 공동 활용을 위해 충남은 대전시 심양사무실에 직원 파견 및 예산 배정 등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반면, 대전시는 충남의 중국상해 해외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면서도 예산지원 및 인력을 파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대전시의 해외 통상업무는 주변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으며 상대 국가의 관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통상 사무실 기능과 우리 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엄선한 후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통상 관련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교류 증진과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국제협력업무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제통상업무를 확대해 나아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전시 국제통상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조직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에서 느끼고 고민해 왔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들에 대해,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아무쪼록 우리 대전이 과학과 기술의 발달 그리고 경제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150만 시민의 미래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 장문철 의원 시정질문서

○議長 金榮寬 장문철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효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먼저, 김인식 의원님께서 복지재단설립에 관련된 질문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잘 파악하신 것처럼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입시다만 실제로 시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 또한 적지 않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 감독 문제도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는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논의가 진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 부산에서는 설립이 이미 돼 있고 또 일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논란은 현실적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과 또 집행사무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시 공무원만 가지고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고 다소 전문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구상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재단을 설립하는 데는 분명히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도 상당한 돈을 들여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만 출연금이 115억원이 들어갔는데 2006년에 지원금이 38억원에 이릅니다.

일정한 출연금을 지급하고도 그것이 부족해서 37억원이 들어가 있고, 부산도 출연금이 10억원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한 12억원이 또 지원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원도 시·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서울과 경기도는 규모가 크니까 한 40명 규모로 돼있고 부산의 경우도 한 12명 정도로 봅니다.

천안의 경우에는 10명 내외로 하고 한 20억원 정도를 출연할 것이라는 게 저희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의원님께서 언급한 내용 중에 보면 이런 재단을 운영하는 데는 당초의 기금 가지고, 기금이자수익 갖고는 굉장히 살림이 어려워서 재단을 운영하고도 매년 30~40억원을 집어넣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기금만 갖고 하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0억원 정도의 기금이 돼야 이자수익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기능적으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들일 바에는 다른 대안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복지재단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법적인 사무의 관리 감독 행위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이중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들을 좀더 저희가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현재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력을 지원하거나 보강해서 그 업무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법과 또 의회나 시민단체 또 전문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좀 보완적 기능으로 전문적이거나 그런 자문적 기능을 충실하게 더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우선 검토해보고 그 이후에야 재원적인 여건이나 다른 지역에서의 사회복지재단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업무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업무가 늘어났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도 아울러서 많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대체하기는 그 분야에 공무원 인력이나 일손을 좀 지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시스템을 갖춰놓은 다음에 그 후에나 추진해볼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언제나 지적받고 있는 내용인데, 국비확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만 국비확보의 과정을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내에서 적절하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구상하는 일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 사업을 만들어내는 일이 저희 공무원과 의원, 지역의 전문가들 협조를 받아서 먼저 만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중앙정부에 설득하는 일인데 여기에는 물론 지역출신 공무원 또 아는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한 1년 동안을 쫓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후반기에 가면 결국 그 돈을 조정하는 기획예산처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기획예산처를 다니게 됩니다.

그후에 최종적으로 국회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또 지역 국회의원과 또 안면 있는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의 추이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노력이라는 것은 ‘예산철만 있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으로서도 1년 내내 시민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일단은 중앙부처도 예방 겸 또 업무 당부 겸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계기마다 지역 국회의원께 상황을 설명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필요하면 소속된 당에 관련된 의원께도 찾아가고 하는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적을 하신 암연구센터와 관련해서는 이 정의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의 국회 정무위원장을 하시는 박병석 의원이 상당히 우리지역 예산의 확보에 그간 의원생활 하시면서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그런 일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시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일환이기도 합니다만 암센터에 대해서 박병석 의원과 우리지역 의원을 제가 만나러 왔습니다.

갔을 때 박병석 의원께서 직접 과기부 부총리께 전화를 하고 “이게 작년부터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하고서 열심히 설득 노력을 해주셨고 또 예결위원장이나 예결위 간사를 만나러 갈 때도 같이 동행하시면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공무원 혼자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본자료나 정보 모든 것들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기부상열차 관련된 국비확보 진행사항은 아직은 자기부상열차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합니다만 추진사업단을 공모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다른 경쟁도시와 경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할 요량으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선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고려한다는 중앙정부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부청사에서 연구단지를 거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확장하는 방법 아니면 대덕테크노벨리를 거쳐서 청주 쪽으로 확장하는 방법 이 두 가지 확장 가능성까지를 포함해서 제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은 계속 진행형인 사항입니다.

특히 대구는 그것을 도심으로 연결해서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대구나 인천, 송도 이런 쪽이 아주 강력한 저희 경쟁도시가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산실이나 저희 해당 실·국에서는 분야별로 접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와 소관된 일은 늘 항상 업무연관을 맺었던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주로 계속적인 협의와 아니면 설득을 하고 나중에 예산부서에서는 기획예산처와 관련된 예산 총괄하는 부서와의 협력이나 또 지원을 요청하는 행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종합적인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는 국회의원님들께 상의드릴 때는 어떤 때는 예산부서에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또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이 찾아다

니면서 한번 부탁한 얘기를 또 강조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다시 부탁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해당 국장이 올라가서 다시 또 설명도 드리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누구든지 자기 도시를 위해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많이 따오면 칭찬받는 일이고 또 쉬운 말로 수지맞는 일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제에 드리고요.

이런 계제에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적으로도 저희가 그런 일을 할 때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 자체로서도 큰 힘이 되고 우리 의회로서도 아주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부터 업무를 저희가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좀 모시고 저희가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재정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선거 때를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교육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구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먹는 것보다 우리들을 가르치는 데 더 애를 쓰셨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물론 교육자치와 일반 자치가 통합이 안 돼서 다소 거리상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고 관심사항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인식합니다.

아울러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무척 쓰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동쪽과 서쪽의 교육격차 문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교육격차에서 경제격차가 나오고 거기에서 지역간에 균열이나 갈등요소가 생긴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시의 여건 내에서는 교육재정에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서 “대전시가 인색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인색한 것은 아닐 것이지요.

아마 제도적인 제한이나 그간에 재원적인 제한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통상 아시는 것처럼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 두 가지 형태로 교육문제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정전출금은 법대로 나가니까 설명드릴 사안이 아니고요.

비법정전출금도 저희가 해마다 늘려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년 2006년에는 한 45억원 정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자료가 돼 있고 앞으로는 이 분야가 더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학교라는 게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학교는 어려운 우리 지역 토지 형편에 굉장히 중요한 공공 공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민들의 자녀들이 교육받고 있는 교육의 현장이고 잘 협력하면

우리 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이나 체육공간이나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학교가 지역의 중심센터화 사업으로 돼야 된다는 데 소신을 갖고 그 분야에 대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일응은 어려운 동네부터 지원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일부 시에서는 취득세, 등록세의 일정한 부분을 조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와 아울러서 적정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육재정을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을 한번 정해놓는 것은 어떤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런 내용 자체를 결국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의원님들 입장에서 교육에 많이 도와주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복지, 지역개발, 문화 이런 쪽에 재원이 줄어드는 상반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재원배분 문제는 저희가 기본안을 구성해서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의회 관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끼리 했는데 의원님과 교육 관계 전문가 또 학부모 이런 분들이 포함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료에 없는 것을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기업 사장 문제는 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기업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이 선택해서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 지금까지 운영을 보면 잘들 하셨습니다만 일부는 적절치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도 현실의 사정입니다.

공기업 사장이 임용돼서 3년의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보장이라는 범위 내에서 지나치게 안주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 3년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가 하는 쪽에도 의문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을 위해서 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잘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돼야 된다는 전제 하에 임기라는 개념을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어제 보고드렸지만 그저 고정된 임기 3년이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사기업체는 아시는 것처럼 1년마다 평가해서 이사를 새로 선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형태에 있다 하더라도 매년 평가를 하겠습니다.

또 그 사이에는 중앙정부만의 평가가 통용이 됐습니다.

중앙정부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공사·공단에 대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인지상정인지라 당연히 중앙정부 평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상여금과 보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런 제도도 바꾸기를 원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 부의해서 지나치게 중앙정부가 비용도 하나도 대주지도 않으면서 평가라는 과정을 거쳐서 평가가 독점돼 있는 형태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서 평가하는 내용도 가미해서 복합적인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몇 적절치 못한 부분으로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결과라든지 적절한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공기업 사장 이후에 시장이 취임해서 일부 전임 시장이 하던 시책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임 시장이 했기 때문에 반드시 후임 시장이 해야 된다는 논리는 없을 겁니다.

또 전임 시장이 한 시책이 좋으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 전임 시장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이어간다는 논리가 아니라면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한번 계기가 되면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시장 개인 제가 공약한 사업이라도 진행과정에서 보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단순한 고집이나 안정성, 연속성 이것만을 주장해서 업무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판단은 항상 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변화를 주는 것이 옳은 의사결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예로 들으신 복지만두레 물론 좋은 구상과 시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다니면서 들어본 얘기에는 그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보고도 듣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세한 얘기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기본 취지와 본질은 좋다 할지라도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다소 수정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호수공원 문제도 선거 당시부터 논란거리로 돼왔습니다.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의견들을 재정립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웬만한 사항들은 아마 거의 다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정무부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정무부시장을 해봤

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정무부시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또 특별하게 행정공무원을 20 몇 년 하다가 정무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유일한 사례입니다 대전시에서는.

그래서 통상 선거 때는 여성, 경제전문가 이런 말씀도 나눈 바가 있고 특히 언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정무부시장 선임에 대해서는 제가 적어도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타이밍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포기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든 경제전문가든 제 임기중에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언론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무부시장을 할 때도 일일이 어떤 행동들을 다 보고할 시간도 없고 저한테 보고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 지위가 되면 적절하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 정무부시장도 이번을 계기로 좀더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처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행사를 다니는 일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도 일부 고려를 하신다면 큰 오해나 또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정무부시장도 앞으로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처신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을 요망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현재는 공기업과 관련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좀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평가할 때 우리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 및 전문가 해서 평가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1차적으로는 저희가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것도 또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무자의 평가를 거친 자료를 의원님과 시민단체 같이 모여서 그것을 심사하면서 다시 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할 수도 있고, 어떤 게 효율적이고 적절한지는 판단을 해서 추진하되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공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장문철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문철 의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의 경제에 대해서 전공과 연관해서 그런지 상세히

분석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잘 경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생산 또 전국에 가지고 있는 비중 또 기업의 수가 적은 문제 또 2003년부터 2004년 사이에 기업이 21개나 줄어든 내용까지도 아주 소상히 적시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대안으로 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저도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어떤 정책이 정부에서 시행될 때 다소 부처끼리 경쟁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옛날 벤처기업을 육성할 때도 한번 붐이 일어나니까 각 부처가 나름대로의 시책을 계속 제기를 해서 지방에 오면 그게 몰려있으니까 조금 중복 또 다기화 이런 문제들이 현상적으로 지방에서는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지방에서는 그것을 통합하고 조정해서 알려드리는 일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진 것들이 사실입니다.

지금 적시한 내용에서 그것을 적시하셨는데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전략산업에 따라서 사업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그동안에 2003년부터 센터구축과 장비구축사업 등에서 기본 인프라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 주요내용이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바이오벤처타운, 지능로봇산업화센터, IT 전용벤처타운, 나노종합Fab센터 해서 첨단산업과 관련된 많은 인프라들을, 장비와 공간 이런 인프라들을 설정하는 데 그간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에서는 2007년 이후의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산업발전로드맵에 의해서 향후 5년간 지역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별·권역별 여건에 맞는 특화분야를 선정해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특성화 육성기본계획에 의거해서 2단계 지역산업발전로드맵을 현재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경제권역 단위의 특화 및 연계 전략을 금년 말까지 수립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이 구축된 공용장비와 입주시설을 활용해서 시제품 개발, 인증사업, 제품시험 평가, 장비교육, 마케팅 등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기능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테크노파크가 우리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재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보면 2002년부터 우리 시는 4대 전략산업 추진에 따라서 테크노파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설립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은 방향을 좀 정돈하고 기능적인 중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구가 지정되면서 저희들은 또 하나 특구지원본부가 행정적인, 지원적

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기능을 보면 아마 이것들이 테크노파크 지정된 것과 아니면 적어도 그 이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는데, 관리부서가 R&D특구지원본부는 소위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이고 테크노파크는 첨단산업진흥재단과 산업자원부가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 소관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판단은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 않겠나 싶고, 그 두 가지 기능들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는 조정기능을 저희가 좀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벤처기업들이 자꾸 떠난다는 걱정을 하셨는데, 일부는 떠나는 분도 있고 또 2000년 이후에 121개 기업이 대전에 들어왔습니다.

떠나는 기업은 조금 여기서 키워놔더니 떠나는 것이고 조금 작은 기업이 들어오고 이렇게 비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언제나 기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일부 상장기업들이 중국이나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지난번에 저도 참가해서 보고 왔습니다만 요즘 추세가 중국시장의 벽을 뚫기가 우리 집안에 앉아서 우리 집안의 사람과 우리 기술만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진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중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할 수밖에 없고, 그런 현상에서 중국의 현지 공장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한 현지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생산시스템을 갖춰주지 않으면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로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듣기에는 기본적인 고급기술과 핵심부품 생산은 국내에서 하고 현지에서는 조립과 관련된 부분으로 조치를 하면서 국내생산 부품들을 수출이라는 형태로 고부가가치로 연계해서 현지에 해당 해외에 전달시켜서 거기서 다른 중국이면 중국에 있는 대기업이나 소비시장에 침투를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간 기업이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든 대전지역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활동에는 우리가 지원할 요량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벤처기업 활동을 위해서 특구 내 감면 문제가 있는데요.

지방세 감면 문제는 어제도 보고드렸다고 지방세 감면조치는 완료가 됐고 국세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 쪽 요구는 ‘한 7년 정도 감면해주십시오’ 하는 요구고 국회의원들도 의견이 다양합니다만 재정경제부는 ‘한 3년만 하자, 경제특구처럼’ 그런 논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3년 이상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금지원이라든지 마케팅지원 이런 등등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왔던 그런 지원기능들은 강화할 것이고, 특히 특구에는 이번에 벤처펀드가 조성돼서 특

구내 50%로 그것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역 전체로 보면 토털해서 70%를 대전지역에 써야 됩니다.

그런 여건들도 우리 특구지역 기업에는 좋은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일부는 특구 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전기료 감면 문제를 지금 노력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제기되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 전기료를 감면해 달라고 하면서 대전시에서는 그러면 물값을 좀 내려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문제나 상수도의 수지문제를 고려해야 될 일입니다만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구 내에 대한 어떤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한번 총 점검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특구활성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활성화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한번 체계있게 담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인 지원책이나 아니면 적어도 종합적인 홍보대책이라도 만들어 볼 요량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테크노밸리의 용지분양과 관련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테크노밸리 내 대기업 용지 3만 1,000평에 대해서 매각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아시는 것처럼 웅진에너지가 1만 4,000평을 입주협약을 했습니다.

그 기대가 크고요, 잔여 면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첨단산업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시계획변경 승인 절차를 현재 이행중에 있어서 금년 말이면 과학기술부의 승인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토지 자원보다는 지금 입주하겠다는 기업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로서는 시급히 산업용지 안에 대한 확보문제가 긴요한 실정입니다.

또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문제가 지금 언론에도 보도돼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하면 산업용지는 입주계약 후 3년 이내에 공장 설립을 착수하고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불법매각양도 업체 3개 소를 적발해서 고발한 바가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게 적절한지 안 한지는 차치하고 현재 규정은 이렇습니다.

또 혜택을 부여받은 각종 세금 즉,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환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산업용지의 불법매각을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용지에 대해서 분양 시 계약조건에 판매특약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별도로 검토해서 불법매각, 토지시세 차익을 누리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실업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일자리창출 문제가 저희한테는 긴요한 사안인데 일자리창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첨단기업이나 지역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더 큰 문제는 국가적인 경제 형태가 호황으로 돌아서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지고의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 나름대로도 연결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인재를 우리 지역 기업들이 채용해주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이외에 또 우리 지역 인재들의 눈높이가 현재 기업이 요구하는 눈높이와 맞지를 않아서 ‘사람은 많이 있는데 또 실업자는 많은’ 이런 이중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자리에 대한 확장 노력을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 등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취업정보센터 등을 확장해서 정보연결기능들을 더 강화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해외시장개척에도 많은 걱정을 하시고 소상하게 현상을 파악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제교류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중국 시장에 남경과 심양에 사무소를 설치해서 공무원들을 파견한 바가 있고 노보시비르스크에는 상품전시장을 운영했습니다.

초기 형태로 아마 적극적인 투자를 못 하고 아주 최소한의 투자만을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확대해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벤처기업들의 해외수출 증가액은 금년 6월까지 전년 대비해서 한 72%가 성장했다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또 충남도와 협의해서 중국사무소 등 아니면 다른 해외시장이든 비용을 서로 분하면서 혼합해서 쓰도록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인력과 예산 지원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보니까 뉴욕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의 3억원의 예산을 쓰는데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동향에 의하면 뉴욕사무소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중국시장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충남도도 마찬가지로 해서 협력하면 충분히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겨울쯤에는 베트남을 한번 방문해서 시장

개척과 아울러서 우리 자매도시에 대한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병합해서 추진해볼 계획에 있고요.

또 알제리 시장에 대한 개척문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국제통상업무와 관련해서 기능을 확대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안 그래도 통상본부를 설치해서 조직과 인력을 개편중에 있습니다.

또 해외자매도시와 우호도시와의 교류 증진을 하고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구상을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조직과 인력을 좀더 강화하고 자매도시나 WTA와 연관된 해외도시와의 네트워킹이나 지원시스템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을 저희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監 金信鎬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교육재정 살리기와 관련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의 재정난 극복문제와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인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교육청의 교육재정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악해서 교육가족들 모두로부터 교육재정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의 교육재정은 국가부담 수입이 76%, 일반회계 전입금이 20%, 자체 수입 4%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빈약하고 국가부담수입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도 내수침체 등 경제사정으로 증가율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세출 측면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아주 높아졌고 장애 학생의 학습권보장 요구 그리고 유아교육의 지원확대,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증가로 인해서 재정수요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교육세 결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학교신설 수요 증가로 2005년도에는 1,080억원의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했던 바 지난 8월, 제가 취임할 당시 확인된 총 부채액이 1,410억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당시 이러한 엄청난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기에는 우리 시 교육청의 재정 여건상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간파하고 재정난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무 부서에 엄명했습니다.

그리고 부채탕감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긴축 재정 운용 및 교육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와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금년 8월에 200억원의 채무를 조기상환했고, 금년도 2회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 예정액 33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2회 추경에서 절감된 예산 80억원과 그리고 2007년도 본예산에 원금 96억원을 계상함으로 해서 2007년도에는 순수채무액이 704억원 정도로 크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15%에 달했던 채무비율도 7% 이하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서 폐교 및 잡종예산의 매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으로부터의 교육경비 유치 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실적으로는 재산활용 가치가 낮거나 대부기간이 만료된 중구 문화동 소재 잡종재산 외 11건을 매각해서 34억원의 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로도 재산의 활용도가 낮은 폐교 및 잡종재산을 선별해서 단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경비유치단을 구성해서 이를 적극 활용해서 기초자치단체 및 대전시 소재 유관기관 그리고 기업으로부터의 교육경비 유치에도 더욱 진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계룡건설로부터 대전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서 기부채납받는 등 다각도로 기업으로부터 교육경비를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육감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저는 전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전면적으로 중앙 기업 또 지방 기업과 접촉해서 지금까지 기업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한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하는 데 특히 중요한 교육에 환원할 수 있도록 설득해서 주로 교육기관이나 학교에 필요한 도서관, 체육관 등 그런 시설설비를 지어서 기부하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일들을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와도 협력해서 여러 가지 공동사업을 펼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광역시와 교육정책협의회를 지난번에 열어서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협력사업을 여러 가지 채택해서 우리 대전광역시는 시민복지 차원에서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생교육 차원에서 서로 상생하고 서로 시민과 학생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를 협의 결정하고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협조해 주신 대전광역시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우리 교육청으로서도 교육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교육사업을 하는 데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들어야 될 것을 지차제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

에 예산절감도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 구와도 그런 협력사업을 많이 벌여가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 기성중학교에 서구청과 협력해서 결국은 단위 학교들이 그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문화센터의 중심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부지를 내주고 시설은 기초자치단체가 해서 학생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이용해서 서로 상생하고 이룰 수 있는 협력사업을 많이 벌어나갈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복지를 위해서도 좋고 또 우리는 결국 교육시설로 활용하면서 우리가 지어야 될 그런 것들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예산도 많이 절감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에서 저의 모든 능력과 의지를 동원해서 기업과 자치단체들로부터 많은 협조와 협력을 받아서 교육시설 설비 등을 충당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이런 정책을 앞으로도 펼쳐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청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미전입된 학교용지부담금이 조속히 전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채무의 안정적인 관리 및 조기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설치 그리고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연도 말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20% 이상을 채무상환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면서 우리 교육재정의 건전재정 기초를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

우리 시의 당면한 교육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긴축재정 운용 등 작은 것부터 솔선 실천함으로써 해서 미래의 동량들이 보다 더 나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 관사를 매각한 것도 부채탕감을 위한 교육지책이었으며 이는 교육감의 강력한 부채탕감 의지를 모든 교육가족들에게 천명하는 특단의 조치였음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교육청 정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청과 교육청간 연계협력강화 및 시민단체,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서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 또 아까 답변에서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시청과 협력해서 김인식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청소년단체 담당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단체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식 의원님의 의견에 많은 부분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중점 사업으로 채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교육청은 그동안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단체를 담당하는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단체 지도사례 연구대회를 매년 개최해서 연구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점수는 승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청소년 단체 중에서 대전시 학생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있는 11개 청소년단체 담당 교사들에게 연구대회를 통해서 연구점수를 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청소년단체 담당교사들이 연구대회를 통해서 연구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청소년단체 활동 담당교사 모두에게 선택가산점을 부여하는 문제는 우리 시 교육청과 교직원단체간의 협약사항에 교육감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선택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교직원단체와 협의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단체와의 협약사항인데 왜 교직원단체와의 협약을 하게 됐는가 하는 문제는 이것은 승진과 직결되는 점수를 주는 것이고 교원복지와 관련지어서 우리 교직원단체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 이것은 교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직원단체가 교육청과 노사간 협약이 제가 취임 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고, 또 청소년단체를 담당하는 것은 일선 학교에서 일종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이외로 사무들이 많은데 그 사무를 나누어지는 사무분장 또는 업무분장의 일환으로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면 물론 청소년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청소년단체 업무를 보는 선생님들의 업무만 과중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타업무를 담당한 선생님들과의 인사상 형평성 문제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승진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제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동안 신중하게 접근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선택가산점부여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게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인사정책 상 여건과 타시·도의 사례를 집중 조사해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현재보다 더 개선된 방안으로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청소년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을 더 낮게 교육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이제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사립 학교 간 그리고 모든 학교 간 교육 환경 격차해소 그리고 교육재정난 극복 등을 위해서 직원들과 밤늦게까지 숙의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저는 시정질문을 받아 본 것이 처음이고 또 여러 의원님들 앞에 서서 이렇게 답변한 것 처음입니다.

그러나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대전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만 5,000여 교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든든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우리 대전교육이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교사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만족을 주는 훌륭한 대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정해년에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풍성한 결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순서로, 먼저 김인식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議員 의석에서 - 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10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議員 먼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성호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가칭 대전사회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건입니다.

사회복지재단의 필요성은 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과 유사한 타시·도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례들을 보아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현재 대전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복지재단설립 검토를 위한 구체적으로 연구 용역을 본 의원은 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榮寬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인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市長 朴城孝 사회복지재단 건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하셨는데 설명드린 것처럼 재원상의 문제가 아주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좀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연구용역비를 세우기는 좀 이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다른 시·도의 운영상태를 출장해서 장·단점을 우선 비교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대전발전연구원이 있고 거기에서도 관련된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들도 활용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처리를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榮寬 시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김인식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金仁植 議員 의석에서 - 예.)

다음, 장문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상정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함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 해 동안 집행한 각종 사업들이 적법 타당하고 효율성있게 추진되었는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되었거나 개선이 요구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여 재차 지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성호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47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出席議員數 19인

김남욱	오영세	장문철	김영관
전병배	김태훈	김재경	곽영교
김학원	조신형	오정섭	송재용
이상태	박희진	박수범	심준홍
이정희	김인식	권형례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	박성호
행정부시장	정진철
정무부시장	이영규
기획관리실장	유상수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자치행정국장	조찬호
문화체육국장	박현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
환경국장	김기갑
교통국장	박환용
도시건설방재국장	이강규
소방본부장	신현철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의수
공보관	류근만
감사관	이충일
기획관	김춘겸
공무원교육원장	송광섭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의수
건설관리본부장	최청락
지하철건설본부장	김광신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教育廳)

교육감

김신호

부교육감

이원근

교육국장

최영일

기획관리국장

이치범